

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안 번호	1820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: 2020년 8월 12일

발 의 자: 김인제, 이병도, 김화숙,
김창원, 추승우, 문병훈,
전병주, 이석주, 유정희,
김혜련, 신원철 의원(11명)

1. 주 문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6조,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37조에 따라 서울시 포스트 코로나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장기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“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”를 구성한다.
- 나.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하며,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.
- 다.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.

2. 제안이유

- 서울시는 정부와 발맞춰 코로나19의 확산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였으나,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침체로 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.
- 또한, 코로나19가 단기적인 충격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, 비대면 문화 확산 등 산업·경제 분야에 큰 변화를 초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업 구조의 전환과 유망 신산업의 육성이 필요한 실정임.
- 이에 따라, 서울시 차원에서 효과적인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영세 소상공인과 노동 취약계층의 보호 등 민생안정대책을 수립하고자 “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” 구성을 제안함.

3. 참고 사항

가. 관련 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,

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」 제37조

나. 예산 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.

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- 서울시는 정부와 함께 코로나19(COVID-19)의 세계적 확산에 대응해 신속하고 투명한 방역 체계의 운영과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우수한 대처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.
- 하지만, 확진자 수의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비가 침체되어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은 급감하였고, 사업 부진과 조업중단으로 실업률이 급증하는 등 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.
- 특히, 최근에 발표된 2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-3.3%로 역성장하였고, 올해 경제 성장률 역시 마이너스로 예측되고 있어 향후 경제 회복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.
- 더욱이, 코로나19가 단기적인 충격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, 비대면 문화 확대, 무인화 기술 촉진, 국가 간 무역장벽 부활 등 산업·경제 분야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 예견되는 상황이다.
- 이에 따라,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2025년까지 총사업비 160조원을 투입해 디지털·환경 분야의 산업과 일자리를 양성하는 ‘한국판 뉴딜정책’을 발표하였다.

- 서울시 역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·소상공인과 비정규직·특수고용노동자 등 노동 취약계층을 보호하면서 코로나19 이후 격변하는 산업·경제 환경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방안의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다.

- 하지만, 현재 서울시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신속하고 실효성이 있는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.

-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과 민생안정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“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” 구성을 결의한다.

2020. 8.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